

아산시 인권의식 인지도

-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가 '대한민국 헌법'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58.8%로 나타남
-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인지도는 21.3%로 나타남

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'대한민국 헌법' 명시 인지도

58.8%



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인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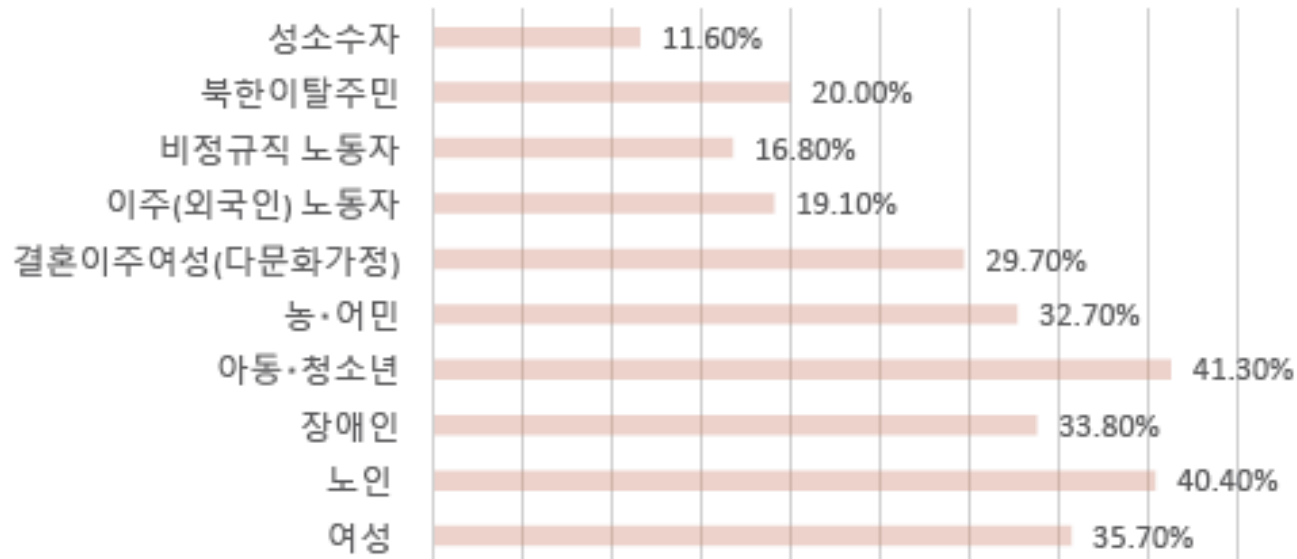
21.3%



※ 자료: 2018년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(<https://www.asan.go.kr/main/cms/?no=85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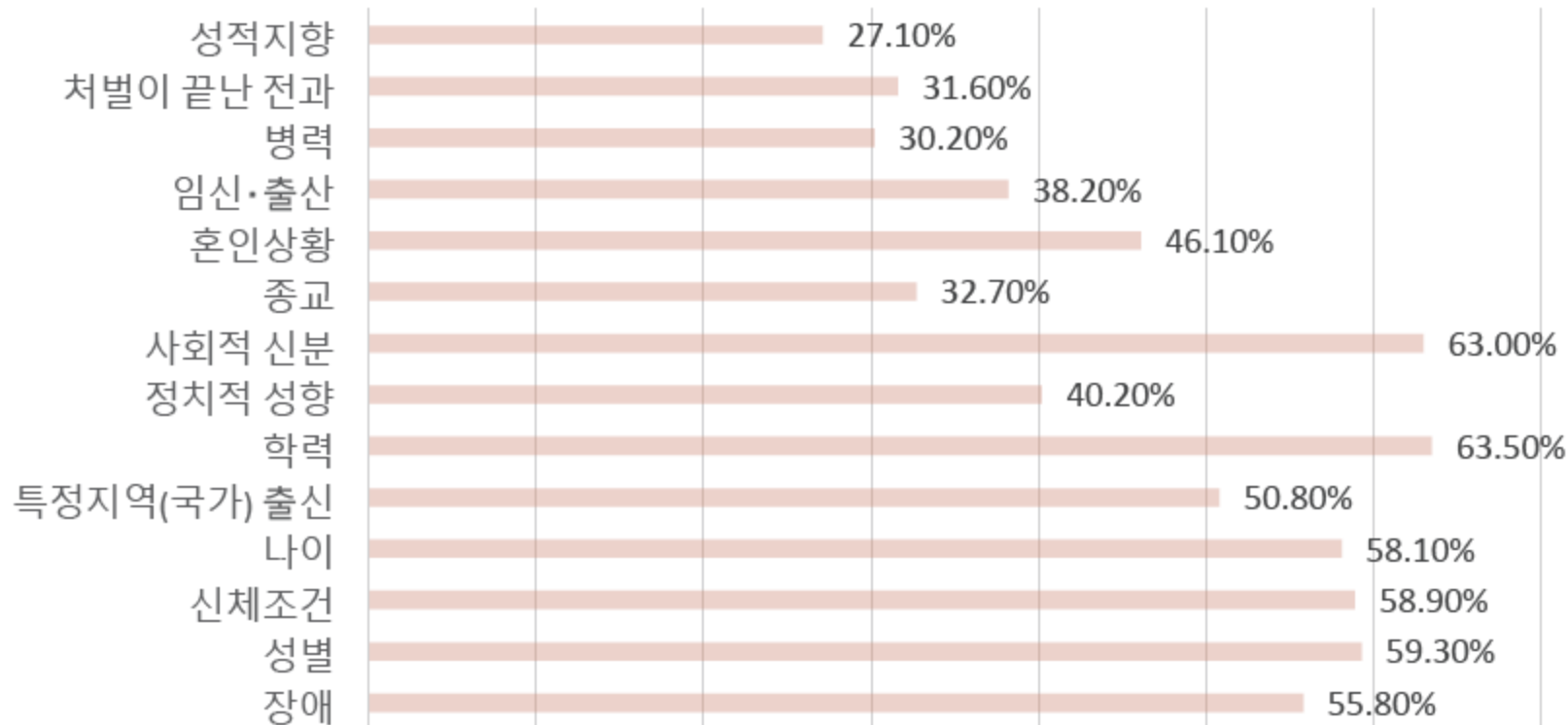
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존중도

- '아동·청소년'의 인권이 보호 및 존중되고 있다는 질문에 41.3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함
- '성소수자' (11.6%) 및 '비정규직 노동자' (16.8%), '이주(외국인)노동자' (19.1%)의 인권 보호 및 존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


인권 침해와 차별

- '학력'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63.5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그 다음으로 '사회적 신분(직업, 직위, 재산 등)'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우가 63.0%로 높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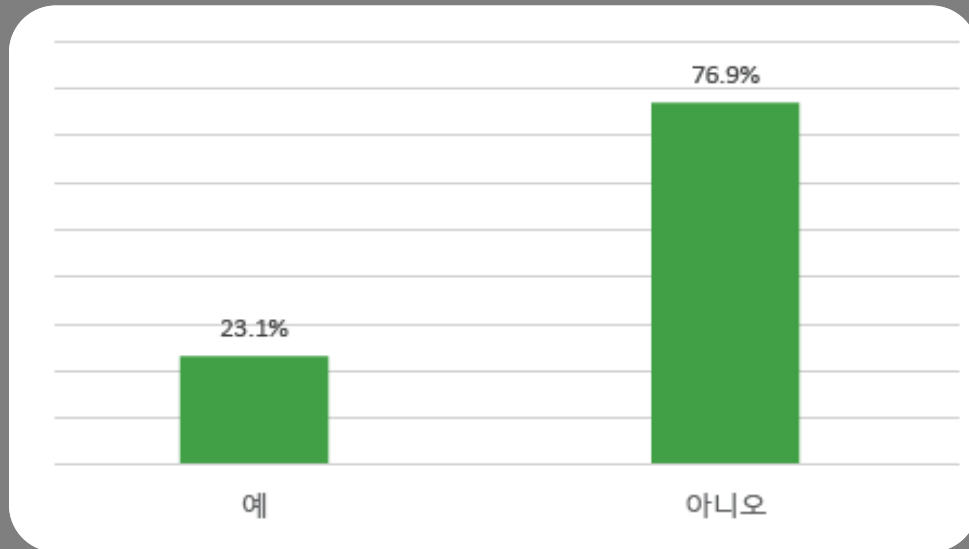
학력

63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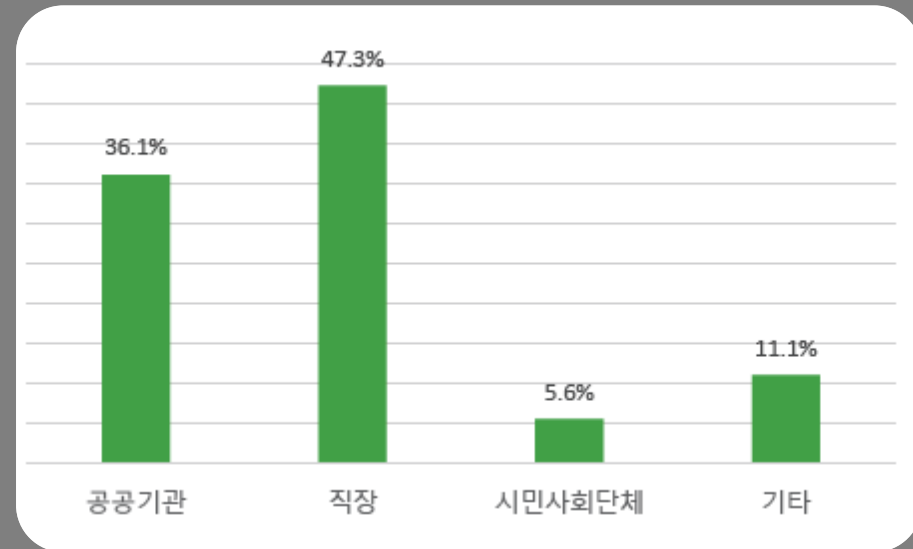
인권교육



- 23.1%가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
- 주로 직장(47.3%), 공공기관(36.1%)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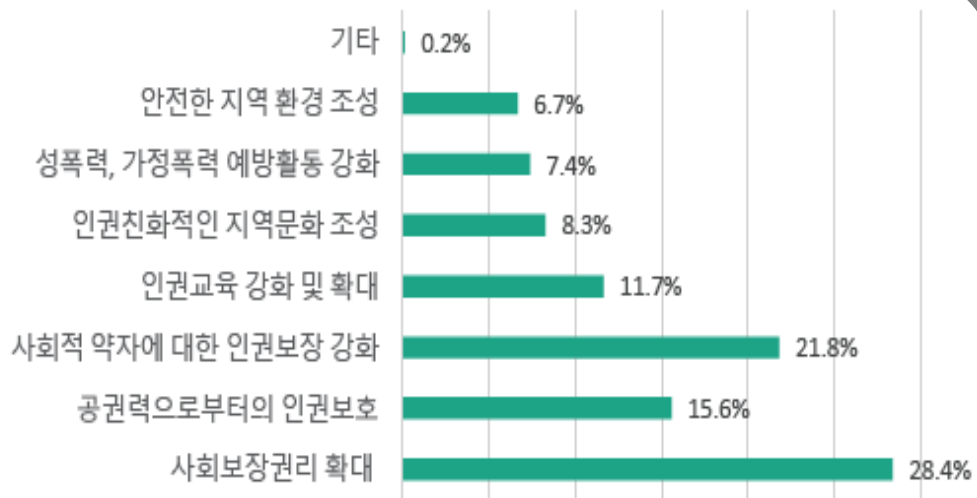
<인권교육 경험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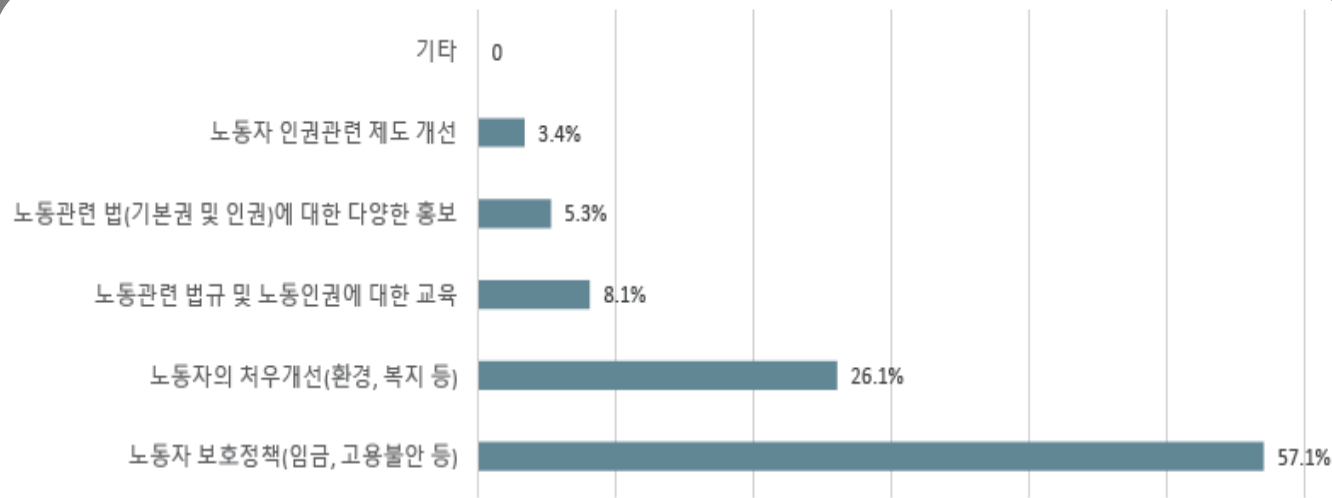
<인권교육 받은 장소>

인권증진을 위한 필요정책

- 인권존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우선 사업영역으로는 '사회보장권리 확대' (28.4%), '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' (21.8%) 순으로 나타남
- 또한,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'노동자 보호정책(임금, 고용불안 등)'이 57.1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

인권존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우선 사업영역(1순위)



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필요정책(1순위)